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다시 살펴보는 4월혁명과 청년운동

전 상 봉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1. 머리말¹⁾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인 1960년의 4월혁명은 한국전쟁 이후 이남에서의 청년운동을 비롯한 각계각층운동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국전쟁 이래 50년대의 학원에는 반복 대결논리가 횡행하여 이승만과 자유당이 개최하는 관제데모의 동원장으로 전락하였다.²⁾ 당시 대학은 사상의 획일화와 경제적 빈곤,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교육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피폐한 상황에서도 1948년 42개의 고등교육기관에 24,000여 명에 불과했던 학생수가 1959년에 이르러 80개 학교에 80,641여 명으로 대폭 늘어났다.³⁾

50년대 학생운동은 1957년 4월 9일 서울대 법대 학생들이 이승만의 양자 이강석의 부정입학에 반대하여 동맹휴학을 전개하였고, 같은 해 7월 12일 홍익대 학생들의 재단 반대투쟁과 9월 10일 성균관대 학생들의 부패 재단 척결투쟁이 일어났다. 이처럼 50년대 학생운동은 몇 차례 학원 민주화투쟁 이외에는 이렇다 할 투쟁

1)이 글에서 청년운동은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단체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청년계층은 고등학생, 대학생, 근로청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청년계층을 동력으로 하는 청년운동은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단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다.

2)50년대 반공 관제데모에 학생들이 동원된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53년 4월 22일 '북진 통일학도 쫓기대회', 1953년 6월 2일 '휴전회담 결정 반대 데모', 1954년 7월 12일 '학도군사 훈련 본격화 방침 발표', 1954년 9월 25일 '미군철폐 반대 국민총궐기대회', 1954년 11월 18일 '영국 캐나다 타협안반대 국민총궐기대회', 1955년 8월 6일 '적성 휴전감시위 추방 국민대회'(4개월 간 학생동원), 1956년 3월 10일 '이승만 대통령 재출마 요청대회', 1956년 10월 20일 '대한학도 반공궐기대회', 1958년 5월 2일 '인도네시아 반공혁명기념 지원궐기대회', 1959년 2월 13일 '재일교포 북송반대 데모'(6개월 간 학생동원) 등 50년대 내내 학생들은 관제데모에 동원되었다.

3)이재오, 『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1984년, 155~156쪽

이 없었다.

이 시기 선진적인 학생들은 사회변혁을 모색하는 소규모 이념서클을 조직하여 사상학습을 전개했다. 서울대 문리대의 ‘신진회’, 서울대 법대의 ‘신조회’, 서울대의 ‘농촌사회연구회’, 고려대 경제학과의 ‘협조회’, 그리고 부산지역의 ‘암장’ 등이 이 시기 활동한 소규모의 이념서클들이다. 이들 서클은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회주의를 표방하기도 했다.⁴⁾

이처럼 각계 민중들이 사회변혁의 활로를 찾기 위해 암중모색하는 가운데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은 온갖 방법을 동원, 독재정권의 연장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승만 정권 아래에서 억눌렸던 민중들의 분노는 1960년 3.15부정선거를 계기로 폭발하여 마침내 4월혁명으로 타올랐다.

2. 4월혁명과 청년학생들의 투쟁

자유당 경북도당은 민주당 선거유세일인 1960년 2월 28일이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유세 참가를 막기 위해 평일과 같이 등교할 것을 지시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에 반대하는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2월 28일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학생들의 이날 시위는 4월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3월 5일 서울운동장에서 있었던 민주당 선거유세에 참가한 서울의 학생들과 시민들은 ‘학생들은 쫓겨하라!’, ‘공정선거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대규모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리하여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으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자 이승만 정권은 부정선거를 자행하면서 탄압을 더욱 노골화했다. 3월 15일 선거가 시작되자 자유당은 관권과 금권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부정선거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가운데 분노한 마산시민들은 부정선거 반대를 외치면서 시위에 들어갔다.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해 총기를 발사하여 마산 시가지가 총성에 휩싸였다. 이날 경찰은 시민들에게 총기를 난사하여 8명이 사망하고 7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날의 시위가 공산당의 조종에 의한 것이라고 사건을 날조하여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마산 시민들의 부정선거 반대투쟁을 시작으로 이승만 정권을 반대하는 여론이 언론계, 법조계, 학계로 퍼져나갔고 학생들의 동조데모가 각지로 확산되었다. 마산 시

4)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한국현대사2』, 풀빛, 1991년, 209쪽

민들과 학생들의 투쟁 소식이 전해지자 3월 16일 서울의 고등학생 500여 명이 동조투쟁에 돌입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투쟁이 이어졌다. 17일에는 전남여고, 진해고, 진해여고, 서울의 성남고, 24일에는 부산고, 부산상고, 25일에는 부산 동성중, 테레사여고, 경남공고, 혜화여고 등 고등학교에서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투쟁이 벌어졌다.

고등학생들의 투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4월 4일 전북대 학생들이 시위에 가담했고, 4월 6일에는 재야 단체들의 주최로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다. 이리하여 고등학생들이 촉발한 투쟁은 마침내 대학생과 사회단체들이 적극 참가하면서 민중항쟁으로 발전해 갔다.

4월 11일 마산 앞 바다에 김주열의 시체가 떠오르면서 민중들의 분노는 2차 마산항쟁으로 타올랐다. 3월 15일 1차 마산항쟁 때 행방불명되었던 김주열 학생은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바다 위로 떠올랐고 성난 마산 시민들은 이승만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격렬하게 시위했다. 4월 12일 마산의 고등학생들이 시위에 들어가자 시민들이 합세하기 시작하여 삼시간에 수천 명이 시위대를 형성, 다음날까지 이승만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마산 시민들의 2차 봉기를 도화선으로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집회를 개최하고 거리로 진출하여 경관대의 경비를 돌파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으로 돌진해 가자 이승만 정권은 반공청년단, 폭력단, 특무대 등의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귀가중인 학생들을 습격했다. 이날의 폭력사태로 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의 학생들이 중상을 입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민중들은 이승만 정권의 폭력에 분노하면서 일제히 떨쳐나섰다. 4월 19일 오전 8시 30분 대광고 학생 1천여 명을 선두로 서울대, 동성고, 고려대, 건국대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시위대는 ‘이승만 물러가라!’, ‘독재자 추방하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국회의사당으로 돌진해 갔다. 시위대는 중앙청, 경무대를 가로지르며 경찰서, 정부기관들을 습격하고 반공회관과 서울신문사 등을 파괴했다. 이날 오후 2시 무렵부터 곳곳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시위대는 2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고 죽음을 각오한 시위대열은 경무대를 향해 나아갔다.

4월 19일 시위에는 부산에서 2만여 명, 광주에서 1만여 명 학생들과 2만여 명의 시민들이 합세했다. 반독재 민주주의 함성이 전국을 뒤덮었던 이날, 경찰의 총격으로 전국에서 186명이 사망하고 6,026명이 부상당했다.

이승만 정권은 4월 19일을 기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중들의 투쟁을 총칼로

막으려 했다. 그러나 계엄령 하에서도 대구, 전주, 인천, 이리, 수원에서는 학생들의 시위는 그칠 줄을 몰랐다.

한편, 3.15부정선거 직후 이승만 정권에 지지를 표했던 미국은 1차 마산 봉기에서 경찰들이 총기 발사하자 수도권의 군지휘권을 한국군에 이양한데 이어 2차 마산봉기와 4월 19일의 항쟁을 경과하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4월 19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주한미대사관은 “시위자들이 데모로써 표현한 정당한 불만이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 이승만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이어 주한 미국대사 매카나기는 경무대를 방문하여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향방에 대해 논의한 뒤, 21일 다시 이승만을 방문하여 한국정세와 4.19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각서를 전달했다.

이승만은 미국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자 국무위원 총사퇴,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 취소, 자유당 총재직 사퇴 등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그러나 대학교수들이 4월 25일 시위를 벌이고 민중들의 투쟁이 다시 촉발되자 4월 26일 하야성명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1960년 2월 28일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투쟁으로 시작된 4월혁명은 3.15 1차 마산항쟁, 4.11 2차 마산항쟁, 4.18고대생 시위, 4.19민중항쟁, 4.25교수단 시위로 발전하여 마침내 4월 26일 이승만의 퇴진으로 일단락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하층노동자, 그리고 무직자 다수가 고귀한 목숨을 민주의 제단에 바쳐야 했다.

4월혁명은 3.15부정선거를 계기로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시위를 주도하고 여기에 민중들이 가세하여 이룩해 낸 승리였다. 그러나 당시 학생들이나 시민들은 이승만의 퇴진 이후를 대비한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그 결과 4월혁명 직후 학생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은 일정한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3. 민민청과 통민청의 결성

이승만 정권의 퇴진이 곧 혁명정부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승만 정권의 퇴진과 함께 허정을 수석국무위원으로 하는 과도내각이 출범했다. 허정 과도내각은 평화적인 정권교체, 3.15부정선거 책임자 처벌, 경찰력의 수습과 정치적 중립 등을 당면과제로 부여받고 있었다. 그러나 허정 내각은 이를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급급했다.

당시 민주당은 ‘혁명의 과업은 완수되었으니 학생들은 학원으로 돌아가라’고 선전하면서 권력을 나눠먹기 위해 자유당과 공모하여 내각책임제로 개헌을 추진했다. 이승만 정권의 퇴진 직후 민중들은 과도정부를 관망하였고, 학생들의 경우 ‘학원으로 돌아가자’는 구호 아래 학내로 복귀, 학원민주화에 주력하였다.

한편, 7월 29일 실시된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8월 13일 대통령에 윤보선을 선출하고, 장면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민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장면 정권은 과벌싸움만 일삼는 부패무능 정권으로 전락해 갔다. 당시 민중들은 철저한 민주화와 혁명의 완수를 촉구하면서 장면 정권을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민중들의 투쟁이 고조되자 장면 정권은 사회 혼란을 방지한다는 미명 하에 반공법과 테모규제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 같은 정세 속에서 이루어진 노동자들의 진출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4월혁명 직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건설에 주력한 결과 1960년 노동조합수는 총 914개로 노동조합이 588개에 불과했던 1959년에 비해 64%가 증가하였다. 특히 1960년 한 해에만 신규 설립된 노동조합이 388개에 달했다. 이는 4월혁명 직후 중소기업에서 노조의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였다.⁵⁾

또한 1960년 4월부터 1961년 5월까지 총 282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1953년부터 1959년까지 연평균 41건의 쟁의에 비해 6.8배나 증가한 것이었다. 쟁의 양식 또한 50년대 7% 미만이던 동맹파업이 1960년에는 19%로 늘어났다. 이 시기 노동쟁의의 주요원인은 임금문제가 127건, 해고반대가 33건, 감독자 배척이 10건으로 경제투쟁이 중심을 이루었다.

4월혁명 직후 전개된 노동운동 가운데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교원노조운동이다. 교원노조운동은 4월 29일 대구시 교원노동조합 결성준비위원회의 건설을 시작으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당국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 설립운동은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7월말에 이르면 전체 교원의 25%에 해당하는 2만여 명이 교원노조에 가입하였다. 1960년 7월 3일 교원노조의 조직정비와 확대강화를 위한 전국대표자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되었고, 7월 17일에는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가 서울에서 소집되어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한국교조)가 출범하게 되었다.

4월혁명 직후 농민운동은 해방공간과 한국전쟁 기간 발생한 양민학살의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투쟁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1960년 5월 11일 경남 거창에서 한국전쟁 기간 발생한 양민학살 문제의 진상규명을 촉구한 것을 시작으로,

5) 「한국현대사 2」, 224쪽

5월말에 이르러 경북 피학살자유족회가 건설되었다. 이어 영남 각 지역에서 유족회가 결성되었고, 8월에는 경남유족회가, 10월 20일에는 경남북 각 시·군 유족회 대표들이 서울에서 전국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하였다.

이밖에도 은행원, 기자 등 지식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였고, 실업자들은 전국실업자구호대책투쟁위원회를 발족(1960.7.27)시켰다.

한편, 이 시기 혁신세력은 7.29총선에 기대를 걸고 사회대중당, 혁신동지총연맹, 한국독립당, 사회혁신당, 한국사회당을 결성하여 선거에 적극 참가하였다. 그러나 금권 관권이 판친 7.29총선에서 혁신계 정당 후보들은 좌익시비에 휩싸이면서 참패하고 말았다. 총선 이후 혁신세력은 선거 패배의 주요한 원인으로 뚜렷한 통일론을 민중들에게 제시하지 못한 것에서 찾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혁신세력은 단일한 통일론의 정립에 주력하면서 이를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해 나갔다. 또한 혁신세력은 혁신세력의 통일 단결을 실현하는 문제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여 통일전선체인 민족자주통일협의회(민자통)의 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민자통 결성을 위한 논의는 1960년 4월 21일 민족건양회 모임인 4월목요회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그 뒤 7.29총선에서 혁신세력이 참패하고 통일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혁신정당과 사회단체를 포괄하여 전선조직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⁶⁾

이즈음 민주민족청년동지회(민주민족청년동맹 전신) 간부들이 서울로 올라와 이 논의에 가세하면서 민자통 결성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1960년 8월 20일 천도교본부 서울사무실에서 민자통 조직이 발기되었고, 9월 3일 민자통주비위가 구성되었다. 민자통주비위는 9월 15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민자통준비위원회로 개칭하였다. 민자통준비위는 9월 30일 자주, 평화, 민주의 3대 통일원칙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남북정치협상 등 5개항의 통일정책을 발표했다.⁷⁾ 통일정책의 발표와 함께 민자통준비위는 중앙상임위원 99명과 각 분과위원장 5명을 선출하고, 준비위원장에 김창숙, 부위원장에 주옥경과 장건상을 추대하면서 본 조직 결성에 박차를 가했다.

민자통은 1961년 1월 15일 강령과 통일선언서, 그리고 1천여 명의 준비위원 명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조직확대 사업에 힘을 쏟았다. 이날 발표된 통일선언서에는 '통일의 자주적 노력'과 '미소 양국과 국제의 공정한 협조'를 강조했다. 그러

6)김지형, 「4·19 직후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조직화 과정」, 역사와 현실 제21호, 역사비평사, 1996년, 140쪽

7)노중선, 「민족과 통일」, 사계절, 1985년, 378쪽

나 이 과정에서 중립화 통일을 주장하는 통일사회당 계열의 인사들과 대종교 등의 일부 인사들이 민자통 준비위를 이탈, 중립화조국통일총연맹(중통련) 발기준비위원회를 개최(1961.2.21)하였다.⁸⁾

이런 과정을 거쳐 민자통은 1961년 2월 25일 천도교 대강당에서 1,560명의 대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결성되었다. 당시 민자통에는 사회대중당을 비롯한 5개 정당과 민민청, 통민청 등 14개 사회단체와 노조가 참가하였다. 민자통은 중앙조직의 결성과 함께 서울,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등 5개 도협의회가 조직된 것을 비롯하여 17개 군에 군협의회가 건설되었다.⁹⁾ 민자통 도·군협의회는 사회당, 혁신당, 사회대중당 계열의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당시 민자통의 실무집행력과 사업을 주도한 단체는 민민청과 통민청 등 진보적인 청년단체들이었다.

민자통은 결성과 함께 2.8한미경제협정 반대투쟁과 민주당이 추진한 2대 악법(반공법, 데모규제법) 반대투쟁, 그리고 민족통일운동을 주도하였다. 불평등조약인 한미경제협정이 체결(1961.2.8)되자 민자통이 중심이 되어 '2.8한미경제협정 반대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고, 민통련 등의 학생단체들이 전국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투쟁에 들어갔다. 또한 민자통은 반민주악법반대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악법반대 전국학생투쟁위원회와 함께 2대 악법반대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이리하여 1961년 3월 18일 경북악법반대학생공동투쟁위원회가 집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3월 19일 이후 전국에서 가두시위와 집회가 개최되었다. 당시 시위에서는 '장면 정권 타도하자'라는 구호와 반미구호가 터져 나왔다.

이처럼 4월혁명 직후 민중들의 투쟁이 고양되는 가운데 청년운동 조직인 민주민족청년동맹과 통일민주청년동맹이 결성되었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통일투쟁이 촉발되기 시작했다.

1) 민주민족청년동맹

민주민족청년동맹(민민청)은 1955년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서클인 암장에서 활동했던 청년들과 1956년 진보당의 외곽 조직으로 부산에서 결성되었던 성민학회(醒民學會)를 모태로 탄생했다.

고등학생들의 학습서클이었던 암장(巖漿)은 「맑스레닌선집」, 「스탈린선집」, 「독

8)김지형, 앞의 글, 143~144쪽

9)한국현대사2』, 246쪽

일이데올로기」, 「반듀링론」 등의 이론서와 월북 작가와 역사학자들의 저서를 읽고 토론하면서 사회 변혁에 눈을 떠갔다.

1957년 근거지를 서울로 옮긴 성민학회 멤버들은 4.19 직후 부산과 대구 출신의 청년들과 함께 1960년 6월 12일 민민청을 결성(1960.6.12)하였다. 민민청은 위원장에 서도원, 간사장에 김금수를 선출하였다. 결성 당시 민민청에 참가한 주요 인사들은 김상찬, 서도원, 도예중, 김금수, 하상연, 이수병, 안상진, 박영섭, 김종대, 박중기, 김달수 등이었다.

민민청은 결성 이후 민자통 조직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¹⁰⁾하면서 2.8한미 경제협정 반대투쟁, 2대 악법제정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그 뒤 민민청 멤버들은 5.16쿠데타로 혁신세력이 탄압받게 되자 비합법 지하조직 활동에 주력하였다. 1964년 박정희 정권이 발표한 인민혁명당 사건에 관계된 민민청 출신 인사들은 도예중(민민청 경북간사장), 김금수(중앙간사장), 김배균(중앙위원), 박영섭(조직국장), 송상진(민민청 경북사무국장) 등이었다. 1974년 발표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는 민민청 위원장 출신인 서도원이 관계되기도 했다. 이처럼 민민청은 5.16쿠데타 이후 비합법 지하활동에 다수의 간부들이 참가하였다.

2) 통일민주청년동맹

통일민주청년동맹(통민청)은 1958년 9월 서울에서 결성된 통일청년회를 모태로 한다. 통일청년회는 울산 출신 자유당 국회의원 김수선의 비서로 있던 김영광의 주도 하에 구성된 청년들의 모임이었다. 통일청년회는 4월혁명 직후 정치적으로 확대된 공간에서 새로운 조직진로를 모색하였고 이즈음 서울대 출신 청년활동가들이 가세하여 통민청을 결성하게 되었다.

1960년 결성된 통민청은 위원장에 우홍선(禹洪善, 본명 : 우동읍 禹東邑), 간사장에 김영광을 선출하였다. 당시 통민청에 참가한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면 우홍선, 최일, 김배영, 김영광, 양춘우, 이재문, 최상진, 유민수, 유찬우, 김재봉, 이규영, 진병호, 박익수 등이다.

통민청의 조직 위상은 민민청과 마찬가지로 청년활동가 조직이었다. 통민청은 각

10)민자통의 실무집행력을 담당한 핵심세력은 민민청과 통민청의 청년활동가들이었다. 민민청 출신의 민자통 간부를 살펴보면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도예중, 조직부장 김상찬, 선전출판부장 하상연, 조사부장 김달수 등이며 통민청 위원장 우홍선은 민자통 조직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였다.

대학 학생 서클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민자통의 결성, 2.8한미경제협정 반대투쟁과 2대 악법 반대투쟁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다.

통민청의 주요 인물 또한 5.16쿠데타로 탄압이 극심해지자 비합법 지하조직 활동을 전개하였다.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때 김영광(중앙간사장), 이재문 등 통민청 출신의 간부들이 연루되었다.

한편, 7.29총선 패배와 민자통이 결성되면서 혁신세력의 통합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당, 사회대중당, 혁신당 등 3당 합당(통일사회당은 불참)이 추진되면서 민민청과 통민청 또한 조직 통합이 제기되어 두 단체의 경북도맹은 1961년 3월 23일 통합을 선언하였다.¹¹⁾ 그러나 민민청과 통민청의 조직 통합은 5.16쿠데타로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4. 4월혁명 직후의 학생운동

이승만 정권 퇴진 이후 학생들은 열려진 정치공간을 주도할 수 있는 조직력과 이론의 부재로 혼선을 빚게 되었다. 이승만이 물러나자 학생들은 “우리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이성으로 돌아가자”는 말과 함께 학내로 복귀하여 학원민주화 운동에 전념하였다.

1960년 5월 3일 어용학생단체인 학도호국단이 해체되고 학생회가 결성되면서 각종 학생단체들이 등장했다. 학생회를 결성한 학생들은 어용교수 퇴진과 학원민주화 투쟁을 전개했다. 연세대 학생들의 학원민주화투쟁을 비롯하여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등의 대학에서 어용교수 퇴진과 학원민주화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대 학생회는 국민신생활운동과 국민계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고, 서울대 여학생회는 여성신생활운동을, 서울대 문리대학생회는 농촌으로 가기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7월 들어 서울대 학생들은 새생활운동반 결대식을 개최, 국민계몽대 7천여 명을 전국 각지로 파견하여 4월혁명 정신의 보급, 주권의식의 고양, 경제복지의 추구, 신생활체제의 수립, 민족문화의 창조 등을 선전했다. 또한 서울대 새생활운동반은 양담배 추방운동을 전개하면서 새생활운동의 입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11)영남일보, 1961년 3월 25일자(홍석률, 「1952-61년 통일논의의 전개와 성격」,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년, 138쪽 재인용)

이처럼 7.29총선을 전후한 시기까지 학생들은 학원민주화운동, 신생활운동, 국민계몽운동에 주력했다. 그러나 총선에서 혁신세력이 참패하고, 민주당 정권의 비협조로 신생활운동이 침체에 빠지자 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통일운동은 7.29총선 패배 이후 혁신세력이 민자통을 결성하고 단일한 통일론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와 맞물려 이루어졌다.

이 같은 흐름 속에 1960년 11월 1일 서울대 민족통일연맹이 발기대회를 갖고 11월 18일 민족통일연맹(민통련)을 출범시켰다. 이듬해 2월 16일에는 성균관대를 비롯한 전국 10여 개 대학에서 민족통일연구회가 발족하면서 학생들의 통일투쟁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1961년 2월 8일 미국이 한국정부에 대해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미경제협정이 체결되자 혁신계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이를 반대,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2월 13일 서울지역 11개 학생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한미경제협정반대 전국학생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다음날인 14일 성토대회를 개최했다.

1961년 3월 8일 민주당 정권이 반공법과 데모규제법 제정안을 발표하자 야당인 신민당을 비롯한 언론계, 법조계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청년단체들은 3월 13일 악법반대 청년단체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악법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이처럼 각계각층의 투쟁이 고양되는 가운데 서울대 학생들은 1961년 4.19 1주년을 맞아 “지금 이 땅의 역사적 사실을 전진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반봉건, 반외압 세력, 반매관 자본 위에서 세워지는 민족혁명을 이룩하는 길뿐이다. 이 민주·민족혁명 수행의 앞길에는 깨어진 조국의 민족통일이라는 커다란 숙제가 놓여 있다”는 내용의 4.19 제2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 서울대 민통련은 5월 3일 남북학생회담을 북측에 제안하였고, 5월 5일에는 전국 19개 대학 학생들이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결성준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은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5월 3일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에서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한 데 관하여 우리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결성준비위원회는 이를 적극 지지할 것을 확인하며, 이를 위한 과감한 실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북한 학생 및 당국의 적극적인 호응을 환영한다.
1. 남북학생회담 장소는 관문점으로 한다.

1. 회담 시일은 5월 이내로 하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에 발표한다.
1. 정부는 우리의 학생회담에 임하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라.
1.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은 지역별 대표를 선정하여 회담 준비를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춘다.¹²⁾

학생들의 통일운동은 민중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민자통 주최로 대구에서 5만여 명의 시민이 모여 통일축진민중궐기대회를 개최(1961.3.1)한 것을 비롯하여, 3.15와 4.19 기념일을 전후한 대부분의 집회와 시위에서 조국통일을 촉구하는 구호가 외쳐졌다.

당시 통일투쟁의 영향은 일본으로 파급되어 1961년 4월 18일 도쿄에서 해방 후 처음으로 총련과 민단 합동으로 평화통일 남북교류축진문화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민중들은 학생들의 통일운동을 전폭 지지했고, 이북 또한 남북학생회담 제안에 환영을 표하였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학생들은 공산당에 철저히 이용”당할 것이라고 호도하면서 남북학생회담을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은 5월 13일 남북학생회담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지하는 집회를 전국 곳곳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민자통은 서울운동장에서 3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남북학생회담 환영 및 민족통일축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남북학생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유엔군은 남북학생회담의 모든 편의를 제공하라’, ‘가자 통일광장으로’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중앙청 앞까지 시위행진을 벌였다.

5월 13일 서울과 부산 집회를 시작으로, 5월 14일에는 광주와 대전에서도 개최되었다. 그리고 5월 16일에는 전주, 5월 17일에는 대구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선도한 통일운동이 급속하게 번져 나가자 분단체제의 해체에 위기를 느낀 미국과 군부세력은 5.16쿠데타를 일으켜 이를 무력으로 저지하고 말았다.

그러나 4월혁명 직후 학생들이 전개한 통일투쟁은 분단체제 아래에서 금기로 여겨졌던 통일문제를 대중적으로 제기하여 민족적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학생들은 통일투쟁을 통해 이남사회에 팽배한 반복대결 이데올로기에 파열구를 내었다.

12) 노중선, 앞의 책, 413쪽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 1960년 4월혁명은 민족분단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이남에서의 변혁운동을 다시 촉발시킨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60년대 청년운동은 학생운동, 즉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의 활동과 투쟁에 의해 그 역사적 흐름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60년대 학생운동이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해온 중심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학생운동은 추상적인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에 기초함으로써 다분히 자유주의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이로 인해 60년대 학생운동은 비지속적이고 단절적인 모습을 보였다. 예컨대 4월혁명 직후 ‘학원으로 돌아가자’는 구호와 함께 학생들이 학내로 복귀하여 국민계몽운동과 신생활운동을 전개한 것은 당시 학생운동의 이념적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5.16쿠데타 직후 박정희로 대표되는 군부세력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것은 당시 학생운동의 한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4월혁명으로부터 촉발된 청년운동은 이후 우리 변혁운동을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되었다. 4월혁명 직후 결성되었던 민민청과 통민청의 청년활동가들은 5.16쿠데타로 공개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인혁당 등 비합 지하조직운동의 주요 멤버로 참가하였으며, 학생운동은 이후 6.3항쟁과 3선 개헌 반대투쟁으로 면면히 이어지면서 반독재 민주화와 자주 통일운동에 중심 동력으로 성장해 나갔다.

특히 현재의 청년운동이 4월혁명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그 중심 동력이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현재 대학생운동이 침체되고 고등학생운동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어떻게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의식화하고 조직으로 묶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현 시기 청년운동의 근본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45년 전의 4월혁명은 오늘의 청년운동이 스스로를 비춰보는 거울인 동시에 살아 있는 교훈이며 과제라 할 것이다.